



## 신고리 5, 6호기 자율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원전과 함께 발전적 미래를 그리는 울주군

박재구  
〈발전산업신문〉 기자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소식을 가장 반갑게 접한 곳이 아마 울주군과 서생면 지역주민들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신고리 5,6호기는 서생면 지역 주민들과 울주군의 자율 유치로 건설이 확정된 원전이기 때문이다.

상업 운전을 앞둔 국내 최초이자 최대 용량인 1,400MW급 원전인 신고리 3,4호기에 이어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 신고리 5,6호기까지 최대 용량의 신형 원전 4개 호기가 들어선 울주군은 원전 자율 유치를 계기로 원전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다.

### 원전사업자와 상생 협력 관계 형성 위해 노력

울주군의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원전과」(과장 안효신)로서 원전지원팀, 원전시설팀, 원전방재팀으로 구성돼 있다.

원전지원팀은 △원전 관련 주요 정책 업무 △사용후 핵연료 공문화 업무 △한수원 지원 사업 △원전 관련 동향 파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전원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 수립 △전원 개발에 따른 용

지 보상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발전소주변지역 육영 사업 △주민 복지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원전해체연구센터 건립 관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전시설팀은 △원전 및 화력기본지원사업 계획 수립 △해안 디자인 개선 사업 총괄 및 기획 △진하 해안 경관 산책로 조성 사업 △수변 공원 관리 △진하해수욕장 지중화 사업 △서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명선교, 명선도 및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봉계 한우테마거리 조성 사업 △온산, 온양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전방재팀은 △방사능방재 정책 수립·시행 △원자력안전·방사능방재 대외 협력 △원전 안전 분야 매뉴얼 수립·시행 △방사능방재 훈련 계획 수립·시행 △방사능방재 대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원전 사고·고장 정보 보고 △환경방사선 이동 탐사 △방사선 비상경보 방송망 확충 및 운영·관리 △원자력 안전 현장 견학 계획 수립·시행 △방사능 정보 홈페이지, 앱, 웹 운영·관리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환경방사선 감시 시스템 확충 및 운영·관리 △방사능방호장구, 방호약품, 방사능측정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울주군은 특히 다른 원전 소재 지자체와는 달리 전원 개발에 따른 용지 보상 업무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

〈표〉 울주군 해양원전과 조직

<b>해양원전과장</b>
• 안효신 (해양원전과 업무 총괄)
<b>원전지원팀</b>
• 이상민 (원전관련 주요 정책업무 전반)
• 박은영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업무)
• 변철환 (전원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추진)
• 오선수 (발전소주변지역 육성사업 추진)
<b>원전시설팀</b>
• 김동순 (원전 및 화력기본지원사업 계획 수립)
• 양경모 (진하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
• 김지훈 (명선교, 명선도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b>원전방재팀</b>
• 김원조 (방사능방재 정책 수립 · 시행)
• 임진책 (원전안전분야 매뉴얼 수립 · 시행)
• 박슬기 (원자력안전 현장건강계획 수립 · 시행)
• 서명훈 (방사선비상 무선시스템 · 경보방송망 확충 및 운영 · 관리)



신고리 원전 3, 4호기 전경



고리원자력본부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남부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제44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孝)한마당잔치'.

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업무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울주군 내에 신고리 3,4호기 및 5,6호기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자율 유치 시 신고리원자력본부 설립을 중앙 부처와 한수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에서는 지난 1월 고리원자력본부 내 울주대외협력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별도 본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는 상생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수원과는 소통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팀별로 업무적으로 수시로 만나 소통은 물론 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 과장은 “지자체는 원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거점 도시 육성 기여**

울주군은 원전이 지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공공시설, 소득 증대 등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거점 도시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원전사업자의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고리원자력본부가 개최한 '제17회 온배수 이용 양식 어패류 방류행사'.

평가하고 있다.

울주군은 지금까지 고리 1호기 계속운전(350억원), 고리 3,4호기 출력 증강(200억원), 신고리 5,6호기 인센티브(1,500억원) 등 총 2,05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다.

울주군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는 사업비 2,801억원(군비 49억원, 원전특별지원금 800억원, 민간자본 1,952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일원에 오는 201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또 일반지원사업으로는 공공시설 및 소득 증대 사업(5,873억원), 육영 사업(1,495억원), 전기요금 보조 사업(2,600억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주군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지난 2015년 4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는데, 유치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비 1,473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은 "매년 지원되는 일반지원금은 100억원 정도로 마을 단위의 소규모 사업 위주로 사용돼 소모적이고 효과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1~2개 사업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안 과장은 "특별지원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며 "신고리 5,6호기 자율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한 좋은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철저한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노력

울주군은 원전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리원자력본부와 함께 '방사선비상 경보 취명 점검 및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고리원전 5km 이내 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경보 사이렌 및 음성 방송에 의한 방사선 비상 가청 상태를 점검했다.

또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등 권역별로 방사능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생면·온양읍(2013년 5월), 온산읍(2015년 6월), 청량면·두동면(2016년 5월)에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평상시·방사선 비상시 원전 주변 지역 환경방사선을 감시하고, 환경방사선량 모니터링 및 울주군 방사능안전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안 과장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신고리 5,6호기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자율적으로 유치했다. 지역 주민들은 원전이 건설돼도 서생면에 계속 거주할 분들이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군에서도 안전 매뉴얼 확보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